화물차 기사들의 12년 외침…삼성이 응답했다

"광주에 물류창고 건립해 달라" 요구에 첫 긍정적 답변
삼성전자, 진곡산단에 2000평 규모 별도의 창고 마련
기사들 환영 속 "여름 수요 많은 에어컨 창고 증설" 요구

광주지역 내 삼성전자 물류창고 조성은 에어컨·냉장고 등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이 생산하는 가전제품을 운송하는 지역 화물차 기사들의 오랜 숙원이다.

비축물량을 조성할 창고가 마련되면 안정적인 운송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은 2008년부터 끊임없이 삼성전자에 물류창고 조성을 요구해왔다.

이들은 올해도 지난 10일부터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앞에서 물류창고 증설을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중이다.

삼성전자가 12년 만에 이들의 '두드림'에 응답키로 하면서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4일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화물연대 삼성분회에 따르면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은 지역 화물차 기사들의 요구사항을 반영, 올해 진곡산단에 6600㎡(2000평) 규모의 창고를 빌려 가전제품을 비축하는데 사용키로 했다.

삼성측이 화물차 기사들의 요구대로 광주에 별도의 창고를 마련, 냉장고 등을 비축하는 데 활용키로 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삼성이 노동자들 요구에 긍정적으로 답변했다는 점도 기존 삼성측 행태와 다르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화물연대 소속 기사들은 여름철이면 늘어나는 수요에 대비, 미리 생산량을 늘려 제작한 에어컨·냉장고를 수도권 비축창고에만 쌓아놓고 있는데 따른 불만을 토로해왔다. 에어컨과 냉장고 등 삼성전자 내 모든 생활가전은 광주사업장에서 만들지만 수도권 수요가 훨씬 많다. 삼성전자 물류 배송을 맡고 있는 삼성전자로지텍이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1만 2000평 규모의 비축창고를 운영중인 것도 이 때문이다.

화물차 기사들은 그러나 광주에다 창고를 만들어놓으면 여름철 물량 출하가 집중되는 시기, 비축해놓은 가전제품까지 실어나를 수 있게 돼 운송 수입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광주에 에어컨 비축창고가 들어서면 성수기 월 평균 배송 횟수가 4회 정도 늘어난다는 게 이들 생각이다. 회당 배송료가 32만원이면 성수기인 여름철, 매달 120만원 가량을 더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다.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화물연대 삼성분회 관계자는 "지난 2008년부터 12년째 광주 비축창고 조성을 요구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화물 노동자들은 올해도 삼성전자 앞에서 집회 신고를 했고 무응답으로 일관했던 삼성전자가 12년 만에 노동자들 의견을 수렴해 비축창고를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관계자는 "화물노동자들 요구를 받아 처음으로 광주에 가전제품 비축공장을 빌려 운영키로 했다"면서 "다만, 에어컨의 경우 경제성 등을 고려해 일단 수도권에만 비축하는 형편으로 이 물량에 대해서도 화물연대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화물노동자들은 창고를 빌려 운영하겠다는 삼성측 입장을 환영하면서도 이왕이면 여름철 에어컨 수요를 고려한 운영 방안도 마련해줬으면 하는 분위기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북구의원 2명 이번엔 꽃집 몰아주기

본인·배우자 운영…수백만원 대 꽃 구청 납품 논란

광주시 북구의회 의원 2명이 본인 또는 배우자가 운영하는 꽃집에서 수백만원 대 꽃을 구청에 납품했다는 문제가 불거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꽃집 2곳에서 각각 십여차례에 걸쳐 493만원, 250만원 상당의 꽃 등 화훼를 일상 경비로 구매해 구청 행사 등에 활용했다.

꽃집 한 곳은 광주 북구의회 이현수(무소속·가 선거구) 의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곳이고, 다른 한 곳은 전미용(민주 비례)의원 본인 명의의 업체였다.

북구는 5개 부서가 이 의원 배우자가 운영하는 꽃집에서 지난 2018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꽃다발과 화분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직 의원인 전미용 의원도 본인이 겸직 신고한 꽃집에서 2018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 부서에 2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거래했다. 두 의원 모두 겸직 신고시 사업자등록번호 일부를 잘못 기재하거나 주소를 다르게 적어냈다는 점에서 허위신고 의혹도 받고 있다.

북구의회의원 행동강령(8조)은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구청 퇴직 공무원 출신인 이 의원은 "37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의원이 됐지만, 한번도 아내의 꽃집을 홍보한 적도 없었다"면서 "사업자등록번호도 기존 신고된 번호를 옮겨 적으면서 오기가 난 것 같다. 하지만 최소한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는 만큼 윤리위원을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구의원 당선 이전부터인 2001년부터 꽃집을 운영하고 있었고 의원 당선 후 매출이 증가하지도 않았다"면서 "지난 3월 꽃집이 이사를 하면서 이전 주소지로 잘못 기재한 것 같다. 관련 규정에 문제가 확실하면 징계를 받아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교통사고 줄이기 VR안경 체험

24일 오후 광주 서구 유스퀘어 버스터미널에서 열린 '교통사고 줄이기 시민의식 개선 캠페인'에서 시민들이 VR 안경을 착용, 음주상태시 느껴지는 신체반응을 체험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지산주택조합, 중복 분양 알고도 조치 안해 피해 키웠다"

비대위 "승인 차질 우려 신고 안해"
경찰 수사도 속도 못내고 답보
조합측 "이중계약 여부 몰랐다"

광주시 동구 지산주택조합 사기 분양 사건과 관련, 조합측이 지난해부터 사기 분양 사실을 알고도 행정기관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절차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찰도 사건에 연루, 피고소인 조사 대상자만 22명에 이르는 사실을 확인하고 15명에 대한 1차 조사를 진행한 상태지만 혐의를 부인한다는 이유 등으로 수사 속도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산지역주택조합 이중계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4일 지역주택조합 이중계약 사건의 의문점을 담은 문서를 수사기관인 동부경찰에 전달했다.

지산지역주택조합측이 1년 전인 지난해 5월부터 업무대행사의 이중계약 피해 사실을 파악하고 대행사로 하여금 일정 시기까지 피해를 원상회복하겠다는 각서를 받았다는 내용의 문서를 경찰에 건넸다는 게 비대위측 설명이다.

비대위측은 "피해자들의 입금 내역을 토대로 이같은 사실을 파악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중계약이 진행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은 "언론에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는 경찰 입장을 내세워 세부 자료를 제시하진 않았다.

사기 분양 관련 혐의자들도 급증하는 모양새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동부경찰은 현재 지산지역주택조합 사기 분양 사건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22명을 입건하고 15명에 대해서는 이미 관련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이들 중에는 잠적한 것으로 알려진 업무대행사 관련자 3명도 포함됐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그러나, 피해자들이 사기 분양에 휘말려 수천만원이 넘는 돈을 지급했는데도, 증거 피의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강제 수사에는 나서지 않고 있어 의구심을 낳고 있다.

지산주택조합장은 이와관련, "조합은 업무대행사의 이중계약 여부를 사전에 알고 있지 않았다" 면서 "117명의 고소인 중 3분의 1 이상이 조합원으로 추정되는 만큼 조합도 피해자"라고 말했다.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조합원들의 분양권을 시세보다 싸게 주겠다는 업무대행사 측 거짓말에 속아 거액을 건넨 일반인 피해자 뿐 아니라, 조합원 중에서도 지정된 신탁회사가 아닌 업무대행사 관계자의 계좌로 돈을 보내 사기 피해를 봤다는 게 조합측 주장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또래 집단폭행 숨지게 한 10대 4명 항소심서 감형

또래 피해자를 장기간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4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들 모두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4명 중 3명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광주고법 형사 2부는 23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0)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20)씨에 대해서도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소년법상 상한 형량인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을 선고받았던 C(19)군과 D(19)군은 성년이 돼 각각 징역 11년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6월 9일 오전 1시께 광주 북구 한 원룸에서 E(18)군을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군을 살해하기 전 두 달여 간 E군을 수시로 폭행하고 돈을 빼앗거나 협박하고 물에 처박아 고문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군 등은 직업학교에서 만난 E군을 반강제로 붙잡아두고 아르바이트비를 빼앗거나 매일 같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상당 기간 폭행을 지속했고 피해자는 다발성 손상을 입음에도 신발을 신고 여러 차례 피해자의 복부를 가격했다"며 "A씨는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사실혼 여성 돈 반환 독촉에 살해한 40대 징역 25년 선고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는 사실혼 관계의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정지선)는 2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에게 4억원 상당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했고, 반환하라고 독촉받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A씨는 범행 후 유흥업소에 다녀오기도 했다. 이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지만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등 진정으로 뉘우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계획 범행이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A씨는 3월 12일 나주시 한 아파트에서 B(52)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